중기 대신 갚은 빚 올 3.6조… 기보·신보 '역대 최대'

기업 부실 누적에 보증기관 위험 부담 늘어 비상등
채권 회수율 기보 3.7%에 불과… 신보는 0.3%로 정체
보증여력 약화→중기 금융 접근성 저하 악순환 우려

경기 불황에 대출 원리금을 갚지 못하는 회사들이 늘면서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의 올해 1~11월 대위변제금이 3조51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기업대출 상담창구. 연합뉴스

기술보증기금(기보)과 신용보증기금(신보)이 올해 1~11월 중소기업 대신 상환한 대위변제금이 3조651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충격이 가장 컸던 2020년(2조1848억 원)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중소기업 부실이 누적되는 가운데 보증기관의 위험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는 신호다.

10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두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위변제금은 기보 1조4275억 원, 신보 2조2242억 원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보증을 선 기업이 부도·폐업·회생 등으로 원리금을 갚지 못할 때 기보·신보가 은행에 대신 상환하는 금액을 뜻한다.

기보의 부실 증가세는 특히 가팔랐다. 기보 대위변제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74%(1942억 원) 늘었으며, 이미 지난해 연간 규모(1조3248억 원)를 넘어섰다.

기보의 연간 환산 대위변제율은 지난달 기준 4.77%로 2021년(4.06%) 이후 꾸준히 4%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11월 기보 보증사고 금액은 1조4249억 원, 사고 업체 수는 4500곳으로, 연간 환산 보증사고율도 5.19%에 달했다.

신보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올해 대위변제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기록(2조2283억 원) 경신이 유력하다. 신보의 11월 기준 연환산 부실율은 3.69%로 2024년(3.64%)보다도 높아진 상태다.

문제는 회수율이다. 기보의 연간 환산 구상채권 회수율은 지난달 기준 3.71%, 특수채권 회수율은 0.45%에 그쳤다. 신보의 지난달 채권 회수율은 0.3%로 사실상 정체돼 있다. 보증기관이 대신 갚은 돈이 사실상 '돌아오지 않는 돈'이 되고 있다는 의미다.

대출금리 부담, 경기 둔화, 구조조정 지연 등 복합 요인이 중소기업 경영을 짓누르면서 부실이 보증기관으로 급속히 전이되는 모습이다. 보증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질수록 보증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 금융 접근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장혜원 기자 hyjang@skyedaily.com

이찬진 "소비자 보호 실패,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서 8개 금융지주 CEO와 간담회
정보기술 보안 강화·지배구조 선진화 등 주문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을 향해 금융소비자 보호, 정보기술(IT) 보안 강화, 생산적 금융확대, 지배구조 선진화 등을 주문했다.

이찬진(사진) 금감원장은 10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14층 중회의실에서 8개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당면 현안과 금융회사가 나아갈 방향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지주사는 그룹의 통할 관리 책임자로서 자회사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조짐을 제때 감지·견제하지 못하면 그룹 전체의 신뢰 위기로 번질 수 있다"며 "소비자 보호 실패는 단순한 경영 리스크가 아니라 생존 리스크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잇따른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대형 금융사고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복잡한 구조의 상품과 비대면 거래 확대로 금융소비자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 "불완전판매를 일부 현장의 일탈로만 치부하거나 사후 보상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금융 신뢰를 지키기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시 금융지주가 리스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감독당국이 '통할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아울러 정보 보안을 "생존을 위한 투자"라며 경영진이 직접 챙겨야 할 과제로 규정했다. 이 원장은 "반복되는 침해사고는 금융의 핵심 가치인 신뢰를 훼손하고 막대한 경제력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 등 사전예방적 보안 감독을 강화하고 IT 거버넌스와 보안 체계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이행'도 핵심 과제로 언급됐다. 그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직무훈련, 디지털 접근성 제고,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 등 다양한 활동이 모두 사회적 가치와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장애인 고용률은 1.6%에 그쳐 민간기업 법정 의무비율 3.1%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하며 금융권이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실질적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생산적 금융도 강조했다. 자금이 부동산 담보 위주가 아닌 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도록 금융의 역할을 확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도 바젤 등 국제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권 자본 규제를 합리화해 생산적 금융 공급이 원활해지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 지배구조 선진화도 촉구했다. CEO 승계 절차를 투명화하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지배구조를 선진화 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상법 개정안이 적용되는 내년 7월부터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는 데 맞춰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FT)'를 이달 중 가동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조 회장은 금융지주가 우리 경제와 금융의 핵심축이라며 "위상에 걸맞게 신뢰를 공고히 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각 금융지주 CEO들도 "보이스피싱, 개인정보 보안, 금융사고 예방 등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그룹 차원의 사전예방 보호 체계 구축과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오늘 논의된 산업과 안정, 혁신과 통제, 성장과 소비자 보호 이슈가 금융산업의 견고한 성장과 금융지주의 역할이라는 큰 방향 속에서 이어지길 바란다"며 "신뢰는 가장 오래 남고 가장 강한 경쟁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도 금융산업의 파트너로서 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이세희 기자 saylee@skyedaily.com

11월 주담대 7000억 늘어… 증가폭은 둔화

10월 2조 원보다 규모 감소
전세자금 등 수요 감소 영향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7000억 원으로, 10월 2조 원보다 줄었다.

한국은행은 '2025년 11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서 11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와 전세자금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아 축소됐다고 10일 밝혔다.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가 11월 대출 증가에 영향을 줬으나, 이를 상쇄하는 요인이 더 컸다는 설명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전달과 마찬가지로 3000억 원 감소했다.

가계의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조2000억 원 증가해 전달 1조4000억 원보다 축소됐다. 한은은 투자자들이 국내외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대출을 받았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타대출 증가에도 주담대 증가폭이 줄며 11월 은행 가계대출은 1조9000억 원이 증가했다. 전달 3조5000억 원보다 줄어들었다.

은행 기업대출은 11월 6조2000억 원 증가해 전달 5조9000억 원보다 소폭 늘었다. 대기업대출은 2조4000억 원 증가해 전달 2000억 원보다 확대됐고, 중소기업대출은 3조8000억 원 증가해 전달 5조7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축소됐다.

회사채 순발행 규모는 4000억 원으로 전달 7000억 원보다 줄었다. 기업어음과 단기사채는 10월 7000억 원 순발행에서 11월에는 2조4000억 원 순상환으로 전환됐다.

은행 수신은 11월 36조6000억 원 증가해 큰 폭 늘었다. 수시입출식예금은 15조2000억 원 증가로 돌아섰고, 정기예금은 4조5000억 원 증가했다. 은행채는 12조 원 증가해 전달 3조4000억 원보다 확대됐다.

자산운용사 수신은 9조7000억 원 증가해 지난달 50조6000억 원보다 증가폭이 줄었다.머니마켓펀드(MMF)는 1000억 원 감소로 전환됐으며, 지난달에는 16조2000억 원이 증가했었다. 주식형펀드와 기타펀드는 각각 6조9000억 원, 8조7000억 원이 유입됐고, 채권형펀드는 6조3000억 원 감소했다.

이선주 기자 sjlee@skyedaily.com